

# 찬반론 뜨겁지만 ‘최소 안전장치’ 공감대

## 청년수당 의의와 문제점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청년수당’은 뜨거운 이슈다. 청년층은 열렬히 환영하고 있지만 기성세대들은 부작용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형평의 문제도 따른다. 부유한 지자체는 청년수당을 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단일 국가공공체가 균열되는 것은 물론 청년수당을 주는 지자체의 청년인구 쏠림현상도 우려된다. 이는 청년수당에 대한 찬반론은 대개 다음 다섯가지 이슈로 정리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계획 발표되었다.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정당과 시민단체까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는 서울시는 올해 8월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29세 3000명의 청년에게 50만원의 현금 지급을 강행했지만 바로 다음날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청년수당 지급은 중지되었다.

앞서 경기 성남시가 청년수당 시행을 발표했다. 인천시, 경기도에서도 청년수당 계획을 내놓고 있다. 현재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여러 시도에서도 청년수당 관련 계획에 대해 논의 중이다. 청년수당에 대한 찬반론은 대개 다음 다섯가지 이슈로 정리된다.

## “포퓰리즘 아니냐” vs “기존 정책은 실패”

### 도덕적 해이 우려엔 “그 돈 받으려 취업 않겠냐” 서울·성남 이어 각 지자체 뒤따르는 추세

▷포퓰리즘 논란=반대 측에서 “앞으로 있을 선거를 위한 좌파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며 청년들에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한다. 이에 찬성측에서는 “포퓰리즘은 대중을 위한 정책이라는 뜻이며 민주주의와 비슷하다. 거기에 좋은 포퓰리즘과 나쁜 포퓰리즘이 있을 뿐이다. 청년수당은 좋은 포퓰리즘이다. 실효성이 문제라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금껏 쏟아내놓은 청년지원정책들은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있는가”라고 반문한다.

▷도덕적 해이=반대 측에서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것을 지급한다면 청년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찬성 측에서는 “활동보고서와 지출내역서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어리석은 청년들은 없다”고 받아치고 있다.

▷수혜자 선발의 공정성=반대 측에서

“서울시가 첫 지급한 2831명 중 114명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선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부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찬성 측에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시범사업이었기에 그 정도의 미스는 발생할 수 있다. 문제점을 보완해 선정기준을 바로잡아 선발의 사각지대를 없애면 되는 것이지 사소한 부작용을 들어 사업 전체를 매도할 순 없다”고 반박한다.

▷꼭 청년에게만 줘야하나=반대 측에서 “예산을 청년보다는 저소득층, 어르신, 미취학 아동 등 어려움 겪고 있는 계층에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찬성 측에서는 “지금까지 저소득층, 빈곤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정책은 있었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처음이다. 그리고 청년이 취업을 해서 그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 다른 복지 정책에 사용하는 것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중복사업 논란=반대 측에서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으니 청년수당은 중복사업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은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수동적 훈련과정일 뿐이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에 필요한 부분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반박한다. 이외에도 ‘구직기간의 불명등 완화’, ‘취업소요시간 장기화’ 등 여러 부분에서 찬반이 나뉘고 있다.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존재한다. 바로 ‘지급되는 현금 또는 상품권의 사용처’ 문제이다. 찬성 측에서도 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구직활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태’나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기여활동을 일정시간 하자’는 등 의견이 나뉜다.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은 청년을 위한 정책에 사다리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계획 발표 이후 성남시, 인천시, 경기도는 구체적인 청년수당 계획을 내놓았고 성남시는 첫 지급이 되었으며 인천시와 경기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의 다른 시·도에서도 청년수당에 대해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청년수당은 국가적 제도로 자리잡게 될 지도 모른다. <김성용 학생기자>

## 독일 1970년대 이미 월 84만원씩 지급 프랑스선 직업교육 받으면 월 129만원

### 청년수당 외국 사례

청년보장의 정책 시작은 1980~90년대의 노르딕 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에서였다. 각 국가 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청년들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었으며, 또 하나는 청년들에게 학업 또는 고용, 직업훈련의 기회를 반드시 보장하는 고용센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정책은 후에 변화가 있었으나 1990년대 경제 위기 등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을 감소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기여하였다. 유럽연합(이하, EU)이 청년 보장 정책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2012년 말, 15~24세 청년 실업률이 23.5%에 이르고, 그리스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 50%를 상회 하는 등의 절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게 배경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적 공동체인 유럽 모델의 위기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의식되어 EU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013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먼저 독일에서는 대학생, 직업교육생, 이주외국인을 대상으로 1970년대부터 최대 월 670유로(한화 약 84만 5200원)를 지원하는 바포그(Bafoeg)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절반은 무상 보조금이며 절반은 정부 보증 대출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프랑스에서는 활동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e Active) 제도를 통해 월 최대 1022유로(한화 129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18~25세 청년들에게 직업 교육을 전제 조건으로 지급되며 소득수준과 결혼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된다. 또한 18세~26세의 청년들에게 월 451유로(약 56만원)의 알

로시옹(현금보조금) 제도도 있다. 동시에 지역별로 청년 개인과 집단에 미션을 부여하고 다양한 직업경험과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3년 10개 구역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노동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벨기에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덴마크에서는 소수 민족 청년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을 장려한다.

호주는 1988년부터 청소년 용돈(Youth Allowance)라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6세~24세의 저소득층 학생, 실업생,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상태와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월 227호주달러~680호주달러(한화 20~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 새출발수당, 청년수당, 중고령자수당, 배우자수당, 미망인 수당 등 다양한 실업수당까지 실용적이다.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에서도 찬반논란은 있다. 청년수당이 청년들로 하여금 나태를 조장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무리 수당을 주어도 극심한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도, 공부도 하지 않는 풍조, 즉 니트(NET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수당은 수입이 없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대폭 줄임에 따라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길이 아예 봉쇄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에서는 근속기간과 실무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청년들은 취업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이기도 하다. <조영훈 학생기자>



지난 10월 22일 진행된 청년 컨퍼런스 회의에서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 수당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지난 10월 광주 아이플렉스 스타트업빌딩에서 열린 제3회 광주창업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년 목소리 집약” 의미 불구 관 주도 아쉬움

## 10월 열린 광주 청년도시 컨퍼런스

“청년은 시민이다 - 시혜에서 권리로”라는 주제 아래 열린 ‘청년도시 컨퍼런스’가 지난 10월 21일부터 이틀간 5.18 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이플렉스 광주 등에서 개최됐다. 청년 당사자 회의, 지방 정부 회의, 해외 네트워크 회의, 전국청년광장 등의 행사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광주 지방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와 단체 등이 참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가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가 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김성찬 광주청년위원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고민을 가진 전국의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의미가 깊었다”고 밝혔고, 최다은 광주전남 UNPO 대표는 “청년들 간의 교류가 한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면서 청년문제를 해결해가는 연대체가 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주최측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참석 청년수가 적어 아쉬움을 남겼으며 광주의 청년정책이 아직은 관 주도 진행한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영주 학생기자>

## 10개 주제 설정 열띤 토론 “입법 통해 직접 지원율”

▷청년당사자회의는 21일 오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주제 테이블 10개가 마련되고 청년들이 주제발표를 하는 형식. 광주 청년위원회, 광주 청년유니온, 전국 청년정책협의회,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전국 미디어 협의회, 광주UNPO, 청

년녹색당, 전국청년모임, 복지공동체 ‘더’ 등 9개 그룹이 운영주체가 되어 주제선정, 참여자 모집, 사전회의 및 당일회의까지 자율적으로 진행했다.

청년 녹색당의 김 현 녹색전환 연구소 부소장은 성남시 청년배당 498명 설문조사 요약 보고서와 함께 청년 배당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청년실신(청년은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이란 신조어가 나올 만큼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현재 청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국가가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부로 하여금 사회복지 재원 투입에 의한 소득 재분배를 통해 청년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가계소비를 활성화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요셉 학생기자>

## 창업은 실패와 인내의 과정 중국 청년 생생한 사례 발표

▷광주창업포럼=10월 21일 광주 아이플렉스(i-PLEX)의 스타트업 빌(Start-Up Vill)에서 ‘제3회 광주창업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해외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연계해 호남대학교 중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광주 청년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중국 창업자 특강에는 선전 5·18 애니메이션 까오지에 대표, 산토 피에스타 전환평 대표, 호남대학 호텔경영학과 석사 과정 루원엔 씨가 강연을 했다. 까오지에 대표는 “창업은 실패 속의 인내의 과정이

다”라면서 실패를 두려워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산토 피에스타 전환평 대표는 자신이 마케팅 분야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업체 창설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줬다. 루원엔 씨는 자신의 전공(관광경영학)과 관심사(미용)를 연계한 자신의 창업 아이템을 소개했다. <김성용 학생기자>

## 양질의 일자리 만이 생존 보장 청년수당 프로그램 꼭 필요

▷청년의 생존할 권리=10월 21일~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기념관에서 청년의 생존할 권리, 자립할 권리, 일할 권리, 참여할 권리 등 4개 주제로 나누어 ‘지방정부 회의’가 열렸다. 한 선 호남대 신방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생존할 권리’ 세션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이 청년의 생존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양호성 서울특별시 청년정책관실 청년활동 지원팀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예로들면서 청년 수당을 청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결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준 학생기자>

## 청년 불행하면 사회전체 불행 광주형 일자리 성공 시켜야

▷청년의 일할 권리=아이플렉스광주 컨퍼런스 홀에서 지방정부 회의의 2번째 세션으로 열렸다. 김기근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년이 불행하면 중앙

년층도 불행해지고 더불어 서로가 불행해지는 우리 사회의 전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권리는 결국 만들어 가는 것이다”며 최근 광주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노사, 행정, 시민 함께 하는 일자리를 모티브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효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회장 문병주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성장만을 가지고 낙수효과를 꾀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분수효과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해답이다”고 주장했다. 문병주 위원은 “일할 권리는 청년 스스로가 권리를 찾을 때 가능하며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근로 계약서를 본인들이 찾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훈 학생기자>

## 청년들 뜻 모을 공간 있어야 SNS·인터넷방송 활용을

▷청년 권리장전 준비=10월 22일 금남로 지하상가내 광주 청년센터 ‘더 숲’에서 광주청년 권리장전 작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가장한 주제에 비해 참석자는 매우 적었다. ‘있다’ 대표 이순학씨도 3개 청년단체 10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청년들이 스스로 주역이 되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기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공간이 없어 활동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만나는 방의 개념은 물론이고 SNS, 인터넷방송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고동혁 학생기자>

## 에너지밸리·야전당·자동차산업 광주 미래 3대 먹거리 주목하라

### 광주시 청년정책위원 임정훈 변호사

-청년정책위원을 맡게된 동기가 있는지요?  
“제가 아직 젊고 현재 청년들의 고민을 겪어본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문제나 복지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광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어떤게 있나요?  
“청년 일자리창출이 최우선이지요. 특이한 점은 청년 정책과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부서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기대가 됩니다. 또 청년조례를 만들었고 청년 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도 조직하였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이나 복지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청년정책 중 청년들의 복지정책도 있나요?  
“구조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년 인재 육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의 실질적인 지원가능 한 도시는 성남시와 서울시 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은 마이너스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유일하게 성남시 분당구와 서울시만 자체예산이 많습니다. 운영권 광주시장도 청년에게 관심이 많고 청년 창업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일자리 창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취업을 개선할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취업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벌 중심의 사회의 구조로 인해 재벌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돈 취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일으키기에 너무나 많은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지방자치정부에서는 취업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접적 복지정책밖에는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청년정책위원으로서 청년들에게 조언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니까?  
“취업을 위해서 광주청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시의 중요 정책 3가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밸리입니다. 현재 나주에 내려와 있는 한전은 연 매출액이 54조에 이르는 세계 100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 내려와 있는 하청업체만 해도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16개의 공공기관도 함께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적극 활용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주시는 현재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도시이며 앞으로는 취업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 광주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활성화로 인프라 산업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 기반은 이미 한류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교류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밸리입니다. 광주시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흐름의 시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해보고 큰 그림을 읽고 준비를 하여 기업가의 마음으로 취업에 임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생각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김하늬 학생기자>